

## “대법원 사법농단, 국민 공분 일으키는 투쟁 벌인다”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규명 피해회복 결의대회... “사법부 구조 쇄신, 피해·명예회복하라”



민중노총이 사법부에 사법농단을 저지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징벌하고, 재심을 통한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중노총이 6월 11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원상회복 6.11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콜트-콜텍지회와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박근혜를 상대로 벌인 사법거래로 인해 피해를 본 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박근혜 청와대로부터 상고법원 설립에 관한 긍정적 대답을 얻기 위해 재판 결과를 박근혜 정권의 입맛에 맞춘 증거가 나왔다. 법원행정처가 반대하는 판사에 대해 뒷조사도 벌였다”라고 지적했다.

양동규 부위원장은 “고용유연화를 위해 KTX승무원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

고, 통상임금은 자본을 위해 소급지급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권의 뜻에 맞춘 판결이었다”라고 양승태 대법원의 행태를 고발했다.

양동규 부위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불법 검찰 고발과 진상 규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회복 ▲법원행정처 혁신방안과 사법농단 재발방지책 제시를 요구했다.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노동자에게 억울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전관예우와 보수 법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법관들이 자기 입지를 위해 박근혜 정권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조미회담과 지방선거가 끝나면 민주노총과 노동자가 뭉쳐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승열 부위원장은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판결, 발레오만도 조직변경

판결도 청와대와 교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할 법관들이 헌법을 유린하고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판결했다. 이런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피해를 입은 전교조와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양승태 대법원은 청와대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전교조의 범외노조 처분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2008년 철도노조 합법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면서 200여 명의 조합원이 해고당하고 17,000여 명의 조합원이 징계를 받는 피해를 입었다.

전국 법원의 법관대표 119명은 11일 사법연수원에 모여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법관대표회의에 맞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철저히 밝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과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의대회를 열었다.

# “사법농단 피해자 노동자가 법원 뒤집어야”

노조 경주지부 결의대회, 양승태, 강기봉 구속촉구 ... “돈 벌려고 노동자, 가족의 삶 파괴하나”

박근혜 정권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벌인 ‘상고법원 설립을 위한 재판거래’로 피해를 본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이 사법 농단 사태 진상규명과 노조파괴 주범인 대표이사 강기봉의 구속을 요구했다.

금속노조와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가 6월 12일 발레오만도 공장 복문 앞에서 ‘양승태 사법 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부당노동행위 강기봉 구속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회는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당시 자본 측의 관심을 받던 발레오만도 산별노조 집단탈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산별노조운동을 무력화하는 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대표이사 강기봉은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 범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 되지 않은 채 항소심을 벌이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여전히 감시와 통제, 차별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태하 노조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은 대회사



에서 “경주지부는 금속노조와 함께 이번 사법 농단 사태 책임자와 노조파괴 주범인 강기봉이 구속되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한규업 발레오만도지회장은 “부당노동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미약하다. 자본기는 돈만 벌 수 있다면 노동자와 가족의 삶을 파괴해도 되는 것이냐”라며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표이사 강기봉에게 중형을 내리라”라고 촉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금속노조 집단탈퇴가 사법 농단으로 인정됐다”라며 “단결과 투쟁이라는 경주지부 정신이 살아있다. 사법 농단 진상규명, 책임

자 처벌하는 날까지 단결해 투쟁하자”라고 조합원을 독려했다.

권영국 경북노동인권센터 변호사는 “사법부는 자유와 권리를 지켜야 하는 존재 이유를 불이한 박근혜 정권에 팔아 넘겼다. 사법 농단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노동자가 사법부를 뒤집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0년 발레오 지본은 어용조직인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을 시주해 금속노조 집단탈퇴를 시도했다. 1심, 2심 법원은 ‘지회는 독립된 노조가 아니다’라며 무효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은 ‘산별노조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원심을 뒤집고 박근혜 정권에게 ‘산별노조 무력화’를 상습했다.

강기봉 발레오만도 대표이사는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을 해고·징계하고 임금을 삭감했다. 2017년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강기봉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강기봉은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해 왔다.

## 현대차지부, “윤여철 가이드라인 깨는 투쟁 준비한다” 기아차지부, “빠르게 쟁의권 확보해 전체 일정 맞춘다”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지회 통합 상집수련회 열어...위원장, “올해 목표 명확하다. 실천은 우리 몫이다”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가 6월 8일부터 9일까지 대구에서 ‘현대기아차 그룹사 지부·지회 통합 상집수련회’를 열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수련회 인사말에서 “5월 25일 새벽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업범위 개악 안이 환경노동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은 파업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전국이 요동치고 있다. 올해 목표는 명확하다. 실천은 우리의 몫이다”라며 “올해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은 하지 않는다. 지금은 기업지부와 지역지부가 함께 6, 7월 투쟁을 조직하고 만들어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지회 통합상집 수련회에 참가한 간부와 조합원들은 ▲현대기아차그룹사 노무총괄 윤여철 부회장의 임금동결 선언

과 그룹사 타결 가이드라인을 전면거부하고 공정한 분배실현 쟁취 ▲금속 산별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 참여확약 없이 2018년 단체교섭 타결 없다’라는 타결방침 준수 ▲현대기아차그룹으로 대표되는 재벌의 착취구조 전면개혁 ▲그룹사 순환출자구조 해소를 명목으로 불법·편법 정의선 경영세습 전면거부를 결의했다.